창사 64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PARAVIEW Since 1995
다르게 짓고 바르게 짓는
삼일건설 · 삼일파라뷰

제8338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음력 11월 22일)

광주시-시의회 '예산 갈등' 폭발…대립 장기화 우려

시의회 내년 예산 2천억원 무더기 삭감 의결
姜시장 "화풀이하나…심의권 남용" 작심 발언
시의회 "양보·타협 거부한 姜시장 책임" 직격

내년 광주시 예산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 광주시 예산을 증액한 푼 없이 이례적으로 2천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강기정 시장이 "예산 심의권 남용"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쏟아내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7조1천102억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광주시는 올해 예산보다 2천441억원(3.5%) 증액된 7조2천535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세출에서 일반회계 180건 총 2천89억원이 무더기 삭감됐다. 반면, 증액 예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삭감된 예산은 대표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 1조420억9천만원 가운데 823억원이 삭감됐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도 900억원에서 100억원 줄었다.

5·18구묘역 성역화 조성 사업비 3억9천만원과 저조한 이용률로 존폐 논란이 일었던 공공자전거 '타랑께' 정거장 설치 예산 3천400만원도 모두 사라졌다.

부실 용역 지적을 받은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타당성조사 사업비 2천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을 심의했고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심의를 마쳤다.

집행부는 자치구 민원 사업 등 시의회 요구 예산 등을 수용하지 않자 예결위는 삭감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겨 그대로 의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여러분이 의결하신 2023년 본예산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남용"이라며 "시 집행부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전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강 시장은 1980년 5·18 관련 예산을 언급하자마자 한참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1980년 새벽 청소차에 실려온 망월묘역과 관련해 각 국별 예산을 넣었는데 잘렸다"며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창업 패키지 일자리 예산이 사라졌다. K뷰티 신산업 예산도 사라졌다"고 시의회 예산 심의를 비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예결위가) 마지막 저에게 20건 중에서 어떤 걸 넣을 거냐고 요청하라고 해 20건 전액을 동의해 달라. 20건은 고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했다"며 "결국 20건 중 17건을 삭감 또는 반영하고 3건만 조정해 오늘 의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8기 새로운 공약 사업과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거나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의결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의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 삭감은 쪽지 예산 요구나 반영 여부 때문이 아닌, 광주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삭감 권한이 있는 시의회 입장에서 쪽지 예산 없이 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을 양지해주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심사 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사업들이 예결위 심사에서 부동의로 뒤집혀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삭감된 본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부활할 여지는 있다. 다만, 광주시와 시의회의 대립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관계 개선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각자 위치에서 원칙과 정도의 길을 가면 된다"며 "의원들은 심의권을 남용하지 않고 집행부와 동반자 관계를 갖고 집행부는 심의권을 존중하면서 동의해주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2면에 계속

/박선강 기자

동복댐 저수율 28.10%
물 공급 가능 일수 : 157일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와 내년 요금인상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광주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은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김애리 기자

'억' 소리 나는 광주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격 완화·부제 해제·요금인상 기대감 영향
거래가 1억2천만원 달해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

광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 '억' 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득 자격을 완화한 데다, 최근 심야 택시대란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 여기에 내년 요금인상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매물은 거의 없어 시세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와 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중개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가격은 1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8천900만원), 대전(1억800만원) 등 타 지역 거래 가격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개인택시 면허 수(278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2억원)과 관광지 특성이 강한 제주(1억8천만원)를 제외하고는 특별시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현재 광주지역 개인택시는 4천789대며 2013년 10대 증차 이후로 약 10년간 신규 증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2018년 시의 택시 자율 감차 정책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후죽순 출시된 택시 플랫폼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2020년 초 1억원선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들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가격대가 1억2천만원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오름세의 원인은 최근 잇따라 풀린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자로 기존 개인택시 운행 요건이었던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일반 차량 5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변경했다.

운수 종사자에 한정됐던 면허가 일반 운전자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어 광주시도 7월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회사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자 지난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1억1천500만원까지 급등했다.

올해도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부제 해제, 요금 인상 등 대책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다시금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의무휴업제(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부제는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로 그간 광주는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로 운영됐었다. 개인택시의 경우 이틀 일하면 하루를, 법인택시는 5일 일하면 하루를 쉬도록 강제됐으나 해당 부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기사 개인 여건에 따라 운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월 이후로 변동이 없었던 택시비의 내년 인상도 개인택시 면허 가격 오름세에 한 몫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간 인건비·유류비·보험비 등이 오른 것을 감안해 택시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현재 3천300원인 기본요금을 3천800원·4천원·4천300원으로 올리는 인상 방안이 제시돼 이를 토대로 요금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초 1억1천500만원 수준이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가격은 하반기에 1억1천800만원으로 한 차례 뛴 후 현재는 1억2천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다.

수요가 늘었음에도 현재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면허 거래 가격이 다시금 뛸 것으로 기대,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이날 한 개인택시 중개플랫폼에서 광주지역 개인택시 매물은 1건에 그친 반면, 구매 의향서를 남긴 게시글은 12개에 달했다.

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조합원은 "광주에서 10여년간 개인택시 신규 증차가 없었는 데다 부제 해제, 요금 인상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택시 면허를 양수받길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현재보다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첫 '野 단독처리' 현실화하나

●정부예산안 처리 오늘 데드라인
민주당 "합의 불발시 수정안 제출"
여야 부담 속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여야가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남긴 14일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께서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러면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감세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유리 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며 "민주당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새해 예산안을 인질로 붙잡은 채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Today

광주·전남 고독사 '위험수위' 6면
선인 향기 품은 호남학 산책 14면
민선2기 전남체육회장 후보공약 16면